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47
----------	-------

발의연월일 : 2021. 6. 10.

발 의 자 : 남인순 · 권인숙 · 김승남
김영호 · 신동근 · 오영환
이형석 · 조오섭 · 진선미
허종식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톱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스톱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톱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

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5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083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톱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톱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하고, 제3장(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톱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의”를 “잠정조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p>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u></p> <p><u>제17조의2(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p> <p><u>제3장 피해자보호명령</u></p> <p><u>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u></p>

<신 설>

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
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
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
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
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 설>

<신 설>

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
간)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
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벌칙</u></p> <p>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략)</p> <p>③ <u>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p> <p>제20조(<u>잠정조치의 불이행죄</u>)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벌칙</u></p> <p>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20조(<u>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p> <p>1. <u>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p> <p>2. <u>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p> <p>제20조의2(<u>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u>)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